光日春秋

전 홍 택

경제 성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연 7% 경제성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인수위는 고유가 등 대외 여건의 악화를 감안하여 올해 성장목표를 6%로 하향 조정했다고 한다. 어쨌든 경제성장이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리가 원하는 성장은 대다수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오는 성장이다. 이러한 성장은 개인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거의 예외없이 더 많은 기회, 다양성에 대한 관용, 사회적 신분 상승 가능성 증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등 사회·정치·문화 나아가서는 개인의 도덕적 성격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배양하는 최상의 토양이다.

미국에서는 2차 대전 후 60년대 전반까지의 활발한 경제성장이 토대가 되어 케네디 대통령 이래 흑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빈곤층 대상 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며, 소수자의 가치관 존중 등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 확산되었다.

반면, 1970년대 들어 지속된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1980년대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의 흑인에 대한 대학입학 할당제 폐지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 축소, 이민에 대한 반감 증가 등 그 동안의 정치·사회·문화적 발전을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외환위기 전까지 연 7%를 넘는 성장을 통해 1960년 50세에 불과하던 기대수명이 1980년 65.7세, 2000년 76세로 늘어나는 등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성장의 토대 위에 정치 민주화에 성공하였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배려 등 다양성에 대한 관용, 사회적 신분 상승 기회제공 등 바람직한 정치·사회·문화적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후에는 경제성장이 연 4% 수준으로 크게 둔화된 가운데 일자리 창출도 연 30만개 이하로 줄어든 결과,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가 2004년부터 4년 연속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도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취업 걱정, 장년층은 실직 걱정에 시달리는 고달픈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연 6%에 달하던 1인당 소득 증가율이 외환위기 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서민·중산층은 성장의 혜택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 둔화가 지속된다면 향후 정치·사회·문화 발전도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 4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이 연 6%대로 상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현재의 4% 후반에서 6%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만약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성장률은 당장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아지면 큰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여러 번 경험한 사실이다.

잠재성장력을 확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다. 미국이 90년대 중반부터 '신경제'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진데 기인한다.

그러나 80년대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규제완화로 경제시스템의 효율이 높아지고 또한 90년대 초 클린턴 대통령의 강력한 재정 적자 감축 추진으로 미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어 장기 금리 하락이 이루어진 것도 90년대 경제 호황의 큰 요인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 프로그램 등 민주당의 야심찬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당선 후 재정 적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 지출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도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번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규제완화와 교육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잠재 성장력 확충을 꾸준하게 추진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입시정책 '오락가락' 수험생 혼란 부추긴다

오락가락하는 입시정책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최근 대학들이 잇따라 본고사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일부 대학이 '수능점수 공개시 정시논술 폐지 검토' 입장을 밝히자 수험생들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수능등급제 실시, 내신반영률 확대 등 강도높은 변화를 수용해야 했던 수험생들이 다시 색깔이 완전히 바뀐 새 입시제도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달 초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수능등급제가 없어진다' '본고사가 부활한다' '논술보다 수능 비중이 커진다' 등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 입시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들이 불확실한 가정과 전제를 앞세워 제대로 거르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본고사 도입 가능성과 논술폐지 검토 소식 등 대학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입시 관련 발언에 수험생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법과 제도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학 자율화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하지만, 당장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입시정책을 단기적인 경제정책 짜듯이 마구 흔들어 놓아 교육현장을 혼돈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인수위에서 나온 설익은 입시관련 이야기들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인수위는 확정되지 않은 새 입시제도의 발표는 엄격히 자제해야 한다. 대학들도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인수위와 대학은 2009학년도 입시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논란 속 국회로 넘어간 정부조직 개편안

대통령직인수위가 16일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행 18부 4처를 13부 2처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기본방향에는 공감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세계적 추세다. 사기업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조직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기능 조정에 집착한 나머지 부처의 상징성이나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유감이다. 통일부 폐지가 대표적이다. 민족 내부의 특수성이 있는 통일부가 외교부로 흡수되면 남북관계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폐지에 따른 논란도 뜨겁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범여권은 통일부 폐지 등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일부에선 통일부 폐지가 범여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히든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부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의 중대사다. 이명박 당선인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문제가 많으면 5년 뒤에 또 바뀔 수도 있는 만큼 보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권은 대립하기 보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폐지되는 부처의 기능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나름대로 존립 근거와 이유를 갖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 수준의 저하나 IT산업의 위축, 여수세계박람회 차질 등 관련 부처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지만 국가의 앞날을 그르쳐서는 조직 개편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한국 단체관광객의 '싹쓸이 쇼핑'

지난해 성탄절 전날 미국 신문에 큼지막하게 실린 제목이다. 기사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명품상가에 한인들이 몰려 특정 브랜드 하루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싹쓸이 쇼핑을 하고 있다. 한인들은 쇼핑몰 내에서도 샤넬, 루이비통, 살바토레, 페라가모 등 명품 브랜드 전용관으로 형성된 구역 일대를 몰려다니면서 쇼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페라가모 매장 측은 매장을 드나드는 고객 대부분은 한인이었고 이날 한인 고객들의 구매액은 이 곳 전체 매출의 50%를 넘겼다고 한다. 한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샤넬의 경우 영업장을 가득 메운 고객들끼리 한국어로 제품을 추천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환율인하 기회를 활용해 미국에서 유명 명품브랜드 상품을 사기 위한 이른바 '해외원정 명품 쇼핑'이 연말연시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한국인들의 외제 명품 과소비가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이날 단체여행객을 이끌고 방문한 가이드는 "한국 관광객들이 이곳 샤넬 매장 물건을 쓸어담다시피 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라며 한국 '명품족'들의 미국원정 쇼핑이 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타 인종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았다. 한 쇼핑몰 근무자는 "한인들의 경제력이 급성장하고 한국이 경제대국이 된 것도 잘 알겠는데 여러 명이 함께 고급 브랜드 매장만 몰려다니면서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다니는 모습은 미국 내 다른 그룹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말했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기사들이 가끔 나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곳에 사는 교포들은 그 가이드의 말처럼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고국의 그런 쇼핑객들에게 분노마저 느끼게 된다. 이들은 선량한 또 어렵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족속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열등의식 정신병 환자입니다'하는 간판을 걸고 활보하는 꼴이다. 그래도 혼자 다니면 조금이나마 나으련만 단체로 몰려다니니 한심스럽다. '한국 사람들은 집단으로 정신병 환자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 아닌가. 이는 고국 전체를 욕 먹이는 행위이다.

한국인들은 왜 그러느냐는 미국 동료들의 물음 속엔 '한국에는 왠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으냐'하는 조소가 느껴져 씁쓸하다.

자기 돈 쓰며 다니는 것을 간섭할 수 없지만 제발 단체로 다니지 말고 혼자 다니기를 부탁한다.

새 대통령이 뽑혔다. 새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내세운다. 이제 '실용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왜 '명품'만을 고집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기 고

한 병 선

교무실 컴퓨터 고스톱 그만하라

얼마 전 한 신문이 학교의 고스톱판을 비판했다. 학생들의 목격담을 인용하며 교무실에서 벌어지는 컴퓨터 고스톱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내용이다. 옳은 지적이다.

사실 교육현장의 고스톱은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과거에도 심했다.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숙직실, 수위실 등지에서 벌어졌다. 교사들은 이곳에서 판돈을 걸고 밤을 새워 고스톱을 쳤다. 그리고 다음날이면 충혈된 눈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다. 심지어 교장, 교감은 물론 학부모들이 동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이런 모습은 사라졌고 추억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왠 일인가. 숙직실과 수위실에서 몰래 벌어지던 고스톱이 버젓이 교무실 한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 과거의 고스톱이 일과 후 행사였다면 지금은 일과 중에도 벌어진다.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모습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주식도 거래된다. 집이나 객장이 아닌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주식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갑자기 컴퓨터 시스템이 느려지기도 한다. 다른 교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컴퓨터만 탓하게 된다. 개인의 돈벌이가 전체에 영향을 주어 업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이들에게 교무실은 연구와 학생지도를 위한 공적공간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고스톱을 위한 여가공간, 주식투자를 위한 사적공간으로 인식된다. 이를 지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공간맹(空間盲)'의 전형이다.

교무실은 학교 공간의 심장부에 해당한다. 교재연구와 학생지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출입이 무상한 곳이다. 그런데 이 곳에서 고스톱판이 벌어지고, 주식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교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고스톱과 주식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가.

그것이 교육적인 것이라면 백번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교무실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사들이 더 잘 알 것 아닌가. 교육현장은 교육 현장다워야 되지 않겠는가. 학생들의 교실 분위기는 탓하면서 교무실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아직도 고스톱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다면 도박장으로 가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교무실이 도박장과 주식객장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 나왔으니 한 마디 더하자. 그럴 시간이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전문적인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IT강국이라는 프리미엄이 교무실에서까지 고스톱과 주식투자로 재현될 필요는 없다.

'컴퓨터로 게임이나 노름만 하는 한국은 진정한 IT강국이 아니다'는 재미과학자 로버트 김의 쓴소리를 교사들이 먼저 새겨볼 것을 권한다.

〈교육평론가〉

無 等 鼓

쌀 소비운동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여주군 흔암리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된 기원전 6~3세기로 추정되는 탄화미(炭化米)들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전통 주식이었던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2006년보다 2.4%가 감소한 76.9㎏으로 나타났다.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쌀 1가마도 먹지 못했다는 계산이다.

쌀 소비가 줄어든 것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참살이(웰빙) 문화가 확산되는 등 우리의 생활패턴이 변화한 탓이다. 반면 채소, 과일류, 육류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패스트 푸드가 청소년 층을 파고 들고 있다. 여기에 우리 사회에 몰아친 다이어트 열풍도 쌀 소비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쌀 소비 감소로 고민하는 것은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 국민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1인당 60㎏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90년대 초반부터 대대적인 쌀 소비 촉진운동을 벌여왔다. 쌀 가공식품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미를 무상 지원하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밥맛에 익숙해지도록 학교급식에서 쌀밥 비중을 늘렸다.

일본 정부가 소비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던 것은 국가 전체의 식량 자급률 저하와 국민 건강 등 소비 감소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쌀은 농민들의 주 소득원으로 여타 작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도인 전남에서는 전체 농가 소득의 61%를 벼농사가 차지하고 있다.

농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기계화 비율이 높은 벼농사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쌀 농사가 무너지면 전남 농촌 붕괴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범국민적인 쌀 소비 촉진운동이 절실한 때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도심 파파라치 농촌으로 이동… 농민 실수 노린다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이 극성이다. 도심의 파파라치들이 농민들을 노리고 있다.

며칠 전 제사 때문에 시골에 갔다가 들은 이야기다.

농사 짓는 형님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사진이 찍혀서 관공서에 불려다니고 나중에는 벌금을 물었다는 것이다.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폐비닐을 약간 태웠는데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고발했다고 한다. 물론 쓰레기를 함부로 태운 농민이 잘못한 것이다. 하지만 농촌은 쓰레기 처리가 제 때 이뤄지지 않고 방치해두면 비닐이 날려 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소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파파라치들이 이것을 노리는 것이다. 농민들에게서 거둬들인 벌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겠다니 참 심뽀가 고약하다.

이런 파파라치들에게 걸려들지 않게 농민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민들의 실수를 노렸다가 고발하는 야비한 세태에 입맛이 씁쓸할 뿐이다.

▲이기훈·광주시 북구 오치동

원어민 강사 자격 2년제 대학 졸업자로 낮춰야

아이들이 다니는 어학원의 원어민 강사 자격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학원강사의 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온 원어민 강사를 구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4년제 대학을 나온 외국인은 연봉이나 기타 후생복리가 떨어지는 한국의 학원강사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문호를 개방한다 해도 외국의 우수 인력들이 한국의 영어강사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4년 대학 졸업자를 어렵게 채용했다고 해도 임금이나 기타 체류비로 인해 고액의 학원비가 불가피하다.

학원 강의는 회화 위주로 진행된다. 학문적 깊이를 논하는 차원 높은 영문학 강의가 아니다. 한 나라의 말을 구사하는 데 최고 학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따라서 자격요건을 2년제 대학 졸업자로 낮추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검증된 인력 확보가 용이해지고, 임금도 낮아져 학원비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윤현숙·순천시 안풍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29 정치부 2200-616 경제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FAX 222-4267〉 사회2부 2200-619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2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FA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